

李 SNS 논란... 여야, 정당성·사실여부 두고 외교위서 충돌

“국제인도법 준수돼야” 글 올려
민주 “국익·인도적 판단 따른 것”
국힘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여야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할 설전으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질 의회에서 “야당이 연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두고 공세를 퍼는 건 국제 정세를 도외시키고 대통령 흡집 내기를 위한 정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을 투척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조현 외교부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SNS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외교적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하는데, 보기에 어땠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스라엘 가자지구나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고, 서방의 말

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고도의 국익적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던 4월13일을 목전에 앞두고 SNS로 큰 실수를 했다”며 “외교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는 우호국인 이스라엘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설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장관을 향해 “각료로서 대통령의 부끄러운 실수를 보듬고 두둔해야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생각

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배현진 의원과 조 장관, 여당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낚였다는 것이 명확한데, 몰랐다면 사과하는 것이 외교적 원칙”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겠나”라며 “앞으로 SNS 게시글을 올릴 때 충분히 검증하고 상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들 바가 없다”고 적은 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민주 지도부 부산 집결... 전재수 지원사격

부산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전재수 “북극항로 경제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중흥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은 전재수”라며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해 “강원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바람 이외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곳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을 일으킬 해양수도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부산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해사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부산 실질적 발전을 전재수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민주당이 전심, 전력, 혼신 힘을 다해 당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도부의 응원을 받은 전재수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해양수산부 건설에 상권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산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작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

세로 만드는 데 전재수와 부산 모든 후보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은 하나 해양수도권으로 확장되고, 포항·여수·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에 부산은 언제나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서도 “부산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면 등을 두드려주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든든하게,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며 사실상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부산은 정치인 위기 탈출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 최고위원은 “부산은 결코 한 전 대표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정치 재개 입시 승장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수 인턴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상임위 독식 막자”... 국힘, 조기 선출론 확산

민주당 원내대표 내달 6일쯤 선출
지선 전 사령탑 교체 부적절 지적도

국민의힘 내에서 5월 중에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는데 대비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6일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내·당규상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5월 둘째 주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새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는 6월16일까지지만, 한달 전에 하지는 의미다.

이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조기 선출 추진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 방송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전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민주당 이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새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사전에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전략을 정리해,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반기 국회는 5월 말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은 임기 종료 전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직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7월 말에야 완료된 전례를 감안할 때, 5월 중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게다가 만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교섭 요구 증가 등 기업 부담 가중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청취했

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어 “거기에는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의견이 맞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